

건설동향브리핑

CERIK

제613호
2017. 6. 12

정책동향

▮ 추경 예산 11.2조원, 11만명 일자리 창출 목표

시장동향

▮ 2017년 4월 전국 주택매매거래량 2.5% 감소

산업정보

▮ 해외 수주 감소와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의 필요성

▮ 세계은행의 2017년 세계경제 전망

▮ 아시아 개발도상국 인프라시장 전망

건설논단

▮ 노후 인프라 개선, J노믹스 '킹핀' 돼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추경 예산 11.2조원, 11만명 일자리 창출 목표

- 건설과 관련된 항목 일부 있으나, SOC 직접 투자는 배제 -

■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경제성장 계획 수립

-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5일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여건 개선을 위한 11.2조원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발표함.
 - 총 11만개 이상 일자리가 창출되어, 일자리 중심 경제성장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됨.
 - 재원은 지난해 세계잉여금 잔액(1.1조원)과 국세 예상 증가분(8.8조원) 및 기금여유재원(1.3조원)으로 마련하고,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조달할 계획임.

■ 중앙정부 7.7조원, 지방정부 3.5조원 배정

- 추경안은 ‘중앙정부 직접 지출’에 7.7조원이 배정되고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재정 보강’에 3.5조원이 각각 배정됨(<표 1> 참조).
 - ‘중앙정부 직접 지출’ 규모 7.7조원은, 일자리 창출에 4.2조원, 일자리 여건 개선에 1.2조원, 일자리 기반 서민 생활 안정에 2.3조원으로 나뉘어 각각 지출될 예정임.

<표 1> 추경안 총괄표

(단위 : 조원)

| < 총규모 > | 11.2 | |
|-------------------------|------|--|
| ◇ 중앙정부 직접 지출 | 7.7 | |
| ① 일자리 창출 | 4.2 | · 공공부문 일자리 · 중소기업 청년 취업지원사업, 재기지원 펀드 조성 · 스타트업·창업 촉진 · 신산업 일자리 창출 · 지역 밀착형 일자리 |
| ② 일자리 여건 개선 | 1.2 | ·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 여성 일자리 환경 개선 · 소상공인 지원 |
| ③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 | 2.3 | · 치매·의료비 등 부담 경감 · 주거·교육 등 생계부담 완화 · 미세먼지·안전·에너지절감 |
| ◇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재정 보강 | 3.5 | ·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6.5).

■ 공공부문 7.1만명, 민간부문 3.9만명 일자리 창출 예상

-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국민 안전·민생 공무원(소방, 경찰, 근로감독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 1.2만명을 포함해 총 7.1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됨.
 -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를 5천명 확충(1.6만→2.1만명)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2.4만명을 확대할 계획임. 또한, 노인 일자리도 3만명 정도 확대할 계획임.
- 민간부문의 경우,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임금지원을 통해 1.5만명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고용장려금, 고용서비스, 창업지원 등으로 일자리 2.4만개 창출을 유도할 계획임.

■ 도시재생 시범 사업 및 청년 임대주택 확대 등 일부 건설 관련 예산 편성

- ‘일자리 창출’ 항목 내에 ‘지역 밀착형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도시재생 시범사업 및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1,014억원이 배정됨.
 - 정부는 지역 밀착형 일자리를 위해서 낙후된 도심에 지역의 산업여건에 맞춰 재생하고 광주형 일자리¹⁾ 도입을 위해 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연구 용역이라고 밝힘.
- ‘일자리 여건 개선’과 관련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2017년 계획보다 2배 확대(180→360개소)할 계획임.
-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 관련, 치매관련 의료 인프라와 청년 임대주택 확대가 예상됨.
 - 치매 안심센터를 47→252개소로 확대(1,418억원)하고, 치매 안심병원도 34→79개소로 확대(605억원)할 계획임.
 - 청년층을 대상으로 도심 내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2,700호를 공급할 계획임 또한,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확충(676기) 및 도시 대기 측정망 신설(34개소), 도시철도 승강장 스크린 도어 안전 보호벽 개선 사업도 일부 건설 산업과 관련이 있음.

■ 공공주도 일자리 창출은 한계가 있어, 사회기반시설 지출 확대 계획 필요

- 고령화 등 사회구조 변화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민간의 고용확대 및 유도를 위한 근본적인 실업해소 대책은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임.
 - 특히 SOC 투자 등을 통한 민간의 일자리 창출이 사실상 전면 배제된 가운데, 향후 공무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만 급증해 재정 부담이 가중될 위험을 가지고 있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SOC 투자와 노후 인프라 개량 투자, 도시 재생을 지원하는 노후 도시 인프라 개량에 관한 연구투자 등 지출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박철한(부연구위원 · igata99@cerik.re.kr)

1) 광주광역시 주도하는 일자리 확대 사업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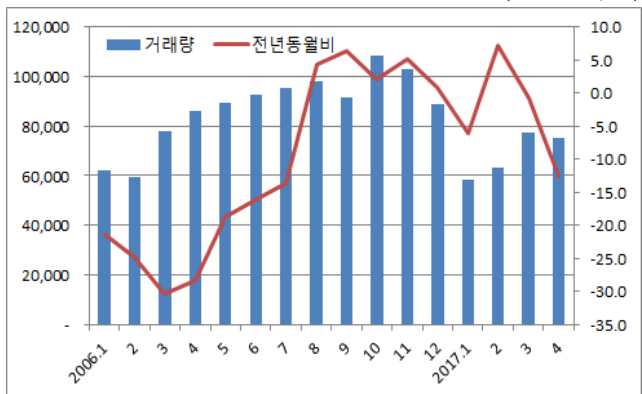
2017년 4월 전국 주택매매거래량 2.5% 감소

- 전년 동월 대비 주택매매거래량은 12.7%, 장기평균은 13.7% 감소 -

2017년 4월 전국 주택매매거래량 전월 대비 2.5% 감소

- 2017년 4월 전국 주택매매거래량은 전월 대비 2.5%, 전년 동월 대비 12.7% 감소한 7만 5,381호 수준을 보임(<그림 1> 참조).

- 유형별로는 전월 대비 다세대 주택(1.3%)을 제외한 유형에서 감소함(단독주택 -3.4%, 다가구주택 -2.6%, 연립주택 -1.7%, 아파트 -3.4%).
- 4월 장기평균(2006~2016) 대비 13.7% 감소하였음.



자료 : 한국감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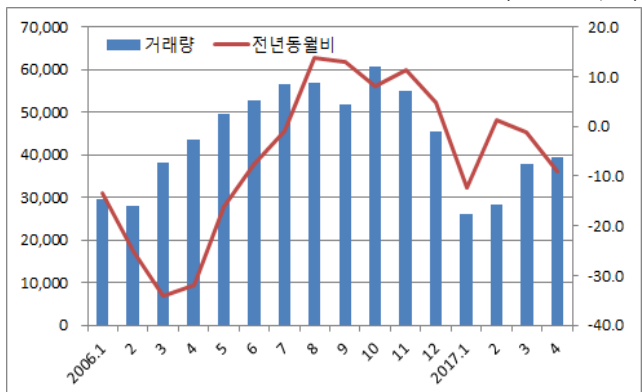
전월 대비 수도권 ↑, 지방광역시 및 기타지방 ↓

- 수도권은 전월에 비해 4.3% 증가하였으나, 전년 동월에 비해 9.2% 감소한 3만 9,467호 수준을 보임(<그림 2> 참조).

- 수도권은 모든 유형에서 전월 대비 증가함(단독주택 2.9%, 다가구주택 7.7%, 다세대주택 3.8%, 연립주택 6.6%, 아파트 4.5%)
- 4월 장기평균(2006~2016) 대비로는 6.4% 감소함.

- 지방광역시는 전월 대비 5.0%, 전년 동월 대비 12.9% 감소한 1만 5,803호 수준을 보임(<그림 3> 참조).

<그림 2> 수도권 주택매매거래량 현황(2016.1~2017.4) (단위 : 호, %)



자료 : 한국감정원

- 지방광역시는 연립주택(8.3%)을 제외한 유형은 전월 대비 감소함(단독주택 -3.6%, 다가구주택 -

12.5%, 다세대주택 -7.3%, 아파트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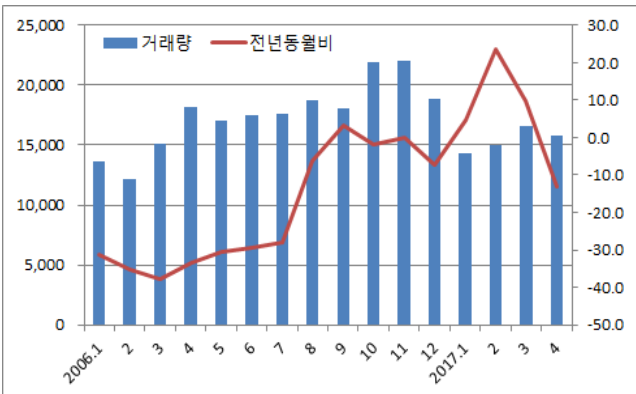
- 4월 장기평균(2006~2016) 대비로는 20.7% 감소함.

● 기타지방은 전월 대비 12.0%, 전년 동월 대비 18.6% 감소한 2만 111호 수준을 보임(<그림 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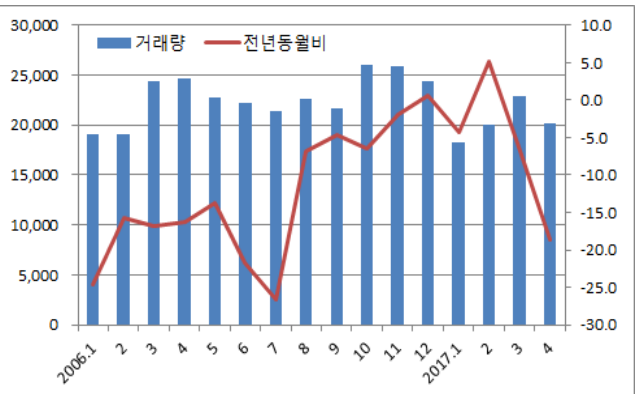
- 기타지방은 모든 유형에서 전월 대비 감소함(단독주택 -7.1%, 다가구주택 -16.1%, 다세대주택 -4.5%, 연립주택 -17.2%, 아파트 -13.8%)

- 4월 장기평균(2006~2016) 대비로는 20.4% 감소함.

<그림 3> 지방광역시 주택매매거래 및 가격변동률 (단위: 호, %)



<그림 4> 기타지방 주택매매거래 및 가격변동률 (단위: 호, %)



자료 : 한국감정원.

전년 동월 대비 주택매매거래량은 감소세, 장기평균도 크게 하회

● 전년 동월 대비 변동률로 살펴본 주택매매거래량의 추세는 2016년 9월을 기준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전국 주택매매거래량은 2017년 1월부터 (-)변동률을 보이면서 감소 폭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도권외의 주택매매거래량 감소세가 점차 지방광역시, 기타지방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4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장기평균을 크게 하회하고 있음.

- 서울, 전남, 세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4월 장기평균을 10% 이상 하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대구, 울산, 충남, 경북은 30% 이상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주택매매거래량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 가격과 다르게 재고주택에 대한 주택매매거래는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엄근용(부연구위원 · kyeom@cerik.re.kr)

해외 수주 감소와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의 필요성¹⁾

- 신시장 개척 및 산업적 가치사슬 확장을 통한 활로 모색 필요 -

■ 해외건설 수주 큰 폭의 감소, 선택과 집중 전략의 한계에 직면

- 과거 국내 건설사들은 해외건설시장에서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플랜트 도급사업을 중심으로 중동 건설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였음.
-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던 해외건설 수주액은 전년 대비 2015년 30.1%, 2016년 38.9% 하락하였고, 2016년 수주 건수 또한 2010년 이후 최저치인 607건을 기록하였음. 2017년 현재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파악됨.
 -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유가하락으로 인한 중동지역의 건설 발주 감소, 경기변동에 따른 플랜트 사업의 리스크 증가, 국내 건설사 간의 과도한 수주 경쟁, 중국 및 인도 등 신흥경제국건설사들의 약진으로 인한 도급사업 수주 경쟁력 감소 등을 들 수 있음.
 - 결과적으로 중동지역, 플랜트 사업, 도급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수행하였던 해외건설산업은 2016년 수주액 및 수주 건수에 있어 최근 10년간 최저치를 기록하였음.
- 현재 위기에 직면한 해외건설은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건설시장에 적합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할 것임.

■ 투자개발형 사업으로의 방향 전환을 통한 해외건설의 활로 모색

- 최근 건설산업의 메가트렌드는 점차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변화하고 있음. 건설 분야 투자개발사업은 ‘금융방식 기준에 의한 사업의 한 형태로 사업 참여자들이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분담하고, 프로젝트의 결과에 따라 발생한 손익을 지분에 의해 분배하여 투자자금의 회수 및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방식’을 의미함.
 - 일반 도급공사에서 건설사는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업무만을 수행하는데 반해, 투자개발형 사업에서는 EPC 업무와 함께 금융(Financing) 및 운영(O&M)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며, 건설사의 수익은 사업의 성과와 연동됨.

1) 본고는 2017년 4월 삼정 KPMG에서 발간한 “위기의 한국해외건설, 투자개발 사업에서 기회를 찾아라”의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하였음.

- 세계은행(World Bank)에서는 민간 참여 인프라 투자(The Pa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PPI)의 구분 및 운영 방법에 따른 분류체계를 제공하고 있음(<표 1> 참조).

<표 1> 세계은행 기준의 PPI 분류 및 세부내용

| 구분 | 운영방법 | 세부내용 | 비고 |
|---|--|--|--|
| 관리 및 리스계약 (Management and Lease Contracts) | 관리계약 (Management Contract) | · 민간 투자자는 관리 서비스 제공 · 대가로 정부로부터 보통 3~5년 동안 고정된 수수료 수취 | - |
| | 리스 (Lease) | ·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을 통해 수익 획득 · 정부에 리스로 지급 | - |
| 신규개발사업 (Greenfield Projects) | BLT (Build, Lease, Transfer) | · 완공 후 정부가 임차하여 민간 투자자에게 리스로 지급 · 계약기간 완료 후 정부에 소유권 이전 | - |
| | BOT (Build, Operate, Transfer) | · 완공 후 계약기간동안 민간 투자자가 운영 · 민간 투자자는 운영을 통해 비용 및 계약상의 수익률을 획득 · 계약기간 만료 후 정부에 소유권 이전 | - |
| | BOO (Build, Own, Operate) | · 완공 후 민간 투자자가 소유 및 운영 | - |
| | Merchant | · 정부의 수익보증 없이 민간 투자자가 자체적으로 시장에 설립 및 운영 | - |
| | Rental | · 정부가 민간 투자자로부터 시설을 임차 · 정부는 단기구매계약을 통해 민간 투자자에게 수익을 보증 | - |
| 재개발사업 (Brownfield Projects) | ROT (Rehabilitate, Operate, Transfer) | · 사업자는 기존자산을 복원하고 계약기간동안 운영하면서 고객 요금을 통해 비용 및 수익을 보전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정부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 | 양여계약(Concession) 형태로 민간투자자는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 및 투자자금을 조달하며, 자산에 대한 소유권자는 정부임.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은 25년 이상임. |
| | RLT (Rehabilitate, Lease, Transfer) | · 개량-리스-양도의 과정으로 운용되는 방식으로 사업주가 기존의 시설물 및 설비를 인수하여 성능을 개량 또는 복원한 후, 일정기간 동안 정부나 관계당국에 임대해주고 임대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 |
| | BROT (Build, Rehabilitate, Operate, Transfer) | · 사업자는 기존설비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투자를 하거나 부분적으로 지어진 설비를 완공하여 기존설비를 복구함. 관리운영권은 계약기간동안 사업자에게 부여되고, 소유권은 정부가 소유 | |
| 매각 (Divestiture) | Full | · 정부가 국영기업의 지분을 100% 민간기업(운영회사 또는 기관 투자자 등)에 매각 | 민간투자자는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 및 투자자금을 조달하며 자산에 대한 소유권 또한 지님. |
| | Partial | · 정부가 국영 기업 지분의 일부를 민간기업에게 이전 | |

자료 : Worldbank PPI data, 삼정 KPMG (2017) 재인용.

- 해외건설이 이러한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시장 개척을 위한 다각도의 계획을 기반으로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력적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야 함. 또한, 산업적 가치사슬 확장을 위한 효율적 조직 구조 운영을 통해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포토폴리오를 변화시켜야 할 것임.

이광표(부연구위원 · leekp@cerik.re.kr)

세계은행의 2017년 세계경제 전망¹⁾

- 신흥경제국과 개발도상국 성장에 힘입은 성장 예상, 하락 리스크 잔존 -

■ 세계 경제 성장률, 2017년 2.7%, 2018~19년 2.9%로 확대 전망

- 신흥경제국(emerging market economies)과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률은 원자재 수출국의 장벽 완화와 원자재 수입국의 탄탄한 성장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전반적으로 각국의 제조업과 무역이 정상화되고 원자재 가격도 안정되어가는 추세이며, 자금조달 여건도 양호하게 유지됨에 따라 성장 확대의 기반이 회복되고 있음.
 - 그러나 무역 제재 증가, 금융시장 혼란, 장기적으로는 잠재적 성장 약화 등 다양한 리스크가 잔존하고 있으므로, 신흥경제국과 개발도상국의 재정 여력 전반에 대한 재건 및 투자, 무역, 생산성 제고를 촉진할 수 있는 개혁이 필요함.

■ 글로벌 성장세도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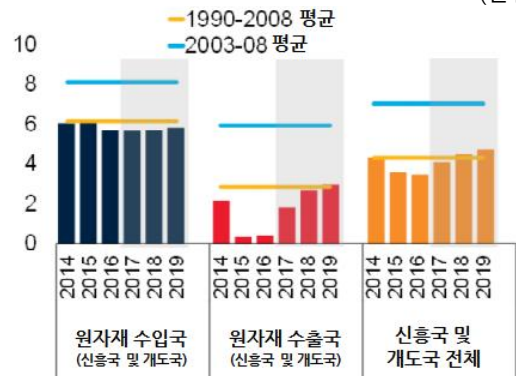
- 선진국들은 투자 주도의 완만한 회복이 진행중이며, 2017년에는 2016년의 1.7%보다 소폭 상승한 1.9%까지의 성장이 예상됨(<그림 1>, <그림 2> 참조).
- 신흥경제국과 개발도상국은 경제위기 이후 지난해 3.5%까지 떨어졌으나 올해 4.1%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8~19년에는 성장률이 평균 4.6%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됨.

<그림 1> 세계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단위 : %)



주 : EMDEs는 신흥경제국과 개발도상국을 의미함.
자료 : World Bank.

<그림 2> 그룹별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단위 : %)



1) 본고는 2017년 6월 World Bank가 발간한 "Global Economic Prospects: A Fragile Recovery"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임.

- 세계 무역은 무너지는 무역자유화와 가치사슬 통합,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 등의 역풍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음.
- 국제 금융 시장은 성장 전망의 기대로 인해 양호한 조건을 유지하고 있고, 증가하는 정책적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도 낮은 상태가 지속됨.

■ 신흥경제국과 개발도상국, 원자재 수출국 vs. 수입국

- 원자재 수출국(앙골라, 아르헨티나, 브라질, 카자흐스탄, 러시아 등)들의 성장은 지난 2년간 정체상태였으나, 불경기가 점차 끝나가는 조짐을 보임. 이 국가들의 성장률은 2017년 1.8%, 2018년 2.8% 등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최근의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원자재 수입국들이 누렸던 이익은 점차 감소하고 있음. 그러나 내수 시장을 위한 완화 정책과 무역 증가 등을 통해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음. 이들 국가들의 성장 전망은 2017~19년 평균 5.7%로 비교적 안정적임.
 - 터키, 인도, 방글라데시,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등이 해당됨

■ 중장기적 전망에 있어서는 여전히 하락 리스크가 지배적

- 주요 선진국의 확장적 재정정책에도 불구하고, 하락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보호무역주의 확대는 교역 회복에 악영향을 미치고 과거 무역자유화를 통해 이룩한 성과를 무너뜨릴 수 있음. 또한 정치적 불확실성은 투자 감소를 유발할 수 있음.
- 또한 유가가 또다시 하락할 경우, 이는 석유 수출국의 회복 지연으로 이어질 것임.
 - 장기적으로 생산성 및 투자 성장 약세가 지속될 경우, 이는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음.

■ 신흥경제국과 개발도상국, 재정여력 회복 및 개혁을 우선으로 해야

- 원자재 가격 하락이 미친 악영향은 점차 사라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신흥경제국 및 개발도상국의 재정 여건은 제한적이며, 지속적인 재정 조정 노력이 이뤄져야함.
 - 성장 전망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환경 개선, 인적 및 물적 자본 투자 지원, 신흥경제국과 개발도상국의 지역 및 세계무역 통합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

박희대(부연구위원 · hpark@cerik.re.kr)

아시아 개발도상국 인프라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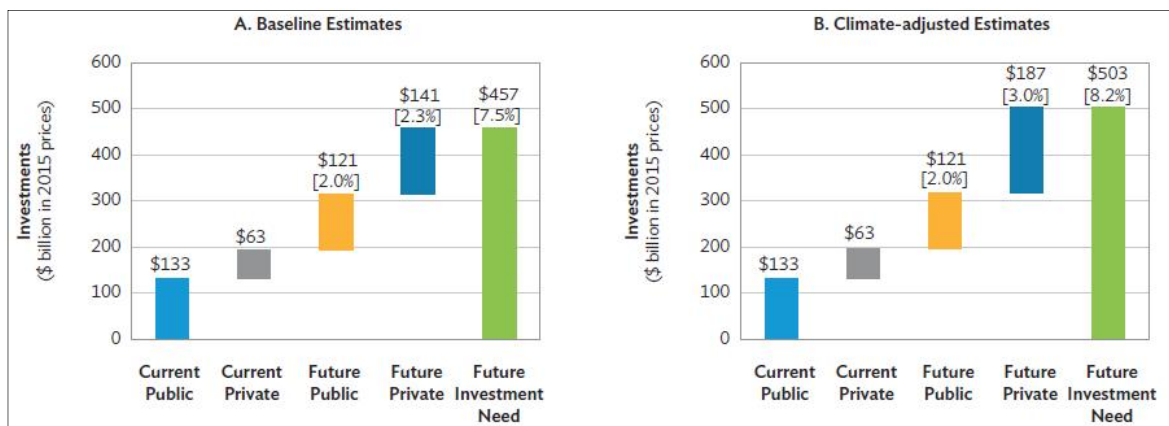
- 향후 5년 간 민간투자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나, 국가별 투자 위험 고려해야 -

■ 아시아 개발도상국, 5년간 약 1,410억~1,870억 달러 인프라 투자재원 부족 예상

- 최근 ADB가 발간한 보고서 ‘Meeting Asia’s Infrastructure Needs’는 아시아 개발도상국¹⁾들의 인프라 투자재원이 향후 5년 간 1,410억~1,870억 달러 가량 부족할 것으로 추정함.
 - 총 인프라 투자수요를 4,570억~5,030억 달러 규모로 추정하였으며, 이 중 공공투자 가용재원 1,330억 달러 및 기존 민간투자 시장규모 630억 달러를 합한 1,860억 달러를 제외하면 추가적으로 필요한 재원 총액은 2,620억~3,080억 달러로 계산됨(<그림1> 참조).
 - 추가적으로 필요한 재원 중 약 1,210억 달러는 투자 효율성 증대, 조세 개혁, 재원배분 최적화 등 공공부문의 노력(‘future public’)으로 충당 가능하다고 분석함.
 - 공공부문의 노력으로 충당 가능한 재원을 제외한 1,410억~1,870억 달러는 결국 민간부문에서 조달(‘future private’)되어야 하므로, 기존 민간투자 규모인 630억 달러와 비교할 때 약 2~3배 정도 추가적인 민간투자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 예측 할 수 있음²⁾.

<그림 1>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의 인프라 투자수요 추정결과

(2015년 명목가격, billion USD, 연간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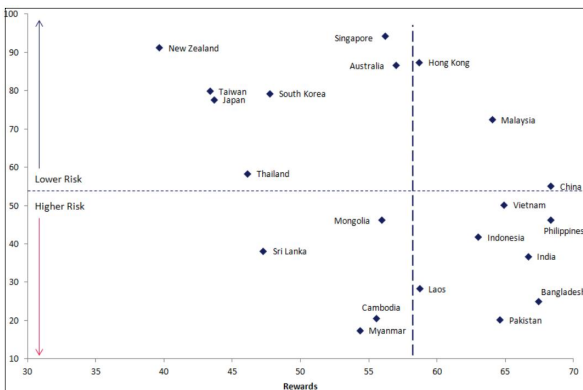
자료 : ADB(2017).

1) 우리나라, 호주, 중국(홍콩 포함), 싱가포르, 대만, 일본 등 제외.
 2) 이는 바람직한 경제성장율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 수준의 재원조달 수요의 규모를 논의하는 것이므로, 실제 민간투자시장의 성장규모 전망과는 구분하여야 함. 어느 국가가 민간투자재원 조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도 실제로 투자 가능한 제도, 환율, 금융시장, 정치적 안정성, 투자환경 등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실제 투자가 가능한 시장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등을 투자매력도가 높은 시장으로 제시.

- 미셸 캐리비스(Michelle Karavias)³⁾는 아시아·서태평양 건설협회 국제연합회인 이포카(IFAWPCA) 제43차 세미나에서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의 인프라 투자 시장을 위험도와 수익률을 기준으로 분석하여 국가별 투자 매력도를 평가함(<그림 2> 참조).
 -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을 투자위험과 시장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등을 투자 매력도가 높은 국가로 제시함.⁴⁾
 - 또한, 비록 현재의 투자 위험도는 높지만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미얀마,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라오스를 검토 대상국으로 제안함.⁵⁾

<그림 2> 아시아 국가들의 투자매력도 분석



자료 : Michelle Karavias, 제43차 이포카(IFAWPCA) 세미나.

<표 1> 국가별 주요 시장 특성(예시)

| 국가명 | 주요 투자기회 | 주요 투자위험 |
|-------|------------|--------------------|
| 베트남 | 교통, 수자원 | 공사(SOE)의 인프라투자 주도 |
| 캄보디아 | 교통시설 | 정책의 일관성, 투명성 등 부족 |
| 라오스 | 철도시설 | 노동문제, 토지와 재원조달 어려움 |
| 방글라데시 | 발전, 교통 | 정책적 투명성 결여 |
| 필리핀 | 철도시설 | 투자 집행과정의 실행 지연 |
| 미얀마 | 철도, 공항, 발전 | 정책집행의 투명성 부족 |

■ 국가별로 상이한 투자기회 및 주요 투자위험 고려 필요

- 하지만 위의 발제자는 각 국가별로 필요한 인프라의 종류와 위험이 상이하므로 투자 검토 시 국가별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함(<표 1> 참조).
- 다만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에서 정책의 일관성 및 투명성에 대한 문제점이 공통으로 지적되고 있음. 아시아 인프라시장 진출에 앞서 정부와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임.

박수진(연구위원 · jin@cerik.re.kr)

3) Head of Infrastructure Research, BMI.

4) 중국도 투자위험에 비하여 투자수익률이 높은 편이므로 투자매력도는 높은 시장이지만, 자국 내 건설기업의 원가경쟁력 및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경쟁도가 너무 높은 시장이므로 논의에서 제외함.

5) 이 국가들은 높은 인구성장률과 경제활동인구비율, 급속한 도시화 진행율, 높은 1인당 GDP 증가율, 적극적인 경제발전 정책 등으로 인하여 인프라 투자수요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함.

노후 인프라 개선, J노믹스 ‘킹핀’ 돼야

미국 토목학회(ASCE)는 지난 3월, 2017년 미국 인프라평가보고서를 발행했다. 16개 시설에 대한 종합 등급은 2013년도와 동일한 D+로 평가됐다. D+ 등급은 시설물이 물리적으로 상태가 불량하고 기능 발휘가 되지 못할 위험에 처해 있는 수준이다. ASCE는 현재 등급을 적정 수준의 등급(B)으로 개량하기 위해서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4조 5900억 달러가 투자되어야 한다고 추산했다. 연간 524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이다.

미국 토목학회의 진단과 평가는 미국 노후 인프라 재건에 10년간 1조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과는 3조 달러 이상의 괴리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재정 부족 문제는 연간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2.5~3.5%를 투자해야 해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ASCE는 재원조달 방안으로 연방, 주,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정부가 요금을 세입원으로 하는 특별회계 계정을 신설하고 이를 종잣돈으로 하는 ‘인프라 신탁기금(trust funds)’의 설치를 제안했다. 또 연방 유류세(federal motor fuel tax) 법안 개정을 통한 ‘고속도로 신탁기금(highway trust fund)’ 확충과 안정적 재원조달이 가능하도록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한 인프라 개량 프로그램 수립과 운영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물 관리 주체와 사용자인 국민이 인프라의 지속 가

능한 사용·유지관리·개량에 소요되는 필수 비용을 인식하고, 이를 부담하는 것이다.

미국 인프라평가보고서는 성공적인 노후 인프라 개량 투자를 위한 몇 가지 요건도 제시했다. 먼저 경제성장, 공공안전, 삶의 질 등 종합적인 편익을 고려한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이다. 연방정부 지원을 받는 57억원(500만 달러) 이상의 사업은 생애주기비용(LCC) 분석을 적용하고 유지관리를 포함한 생애주기 투자계획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노후 인프라 개량비용을 투자하는 시설물 관리 주체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 마련과 민간자본이 주요 재원조달 수단으로 정착되도록 민간자본 유치 활성화 정책 개발의 중요성도 지적했다.

우리 사정도 노후 인프라 개량 투자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전전공공하는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 미국과 별반 다르지 않다. 미국 노후 인프라의 과거와 현실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고 노후 인프라 개량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노후 인프라 개량 정책은 ‘J노믹스의 킹핀’이 되기에 충분하다. 아울러 이러한 투자로 양성된 경험인력과 실적을 가진 대한민국 건설산업은 연간 500조원에 달하는 미국 등 해외 인프라 시장에서 선도자(First Mover)로 자리매김하는 꿈을 실현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거듭날 것이다.

〈건설경제, 2017. 5. 29〉

이영환(연구본부장 · yhlee@cerik.re.kr)